

농촌의 교육 현실과 문제점



우골탑(牛骨塔)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학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시켜 대학을 보내야 출세할 수 있다는 교육·사회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세대들은 어렵지만 가족처럼 소중한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 교육에 투자를 하였다.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성장·발전시켰고, 개인적으로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처럼 농촌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출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 교육 현실은 과거의 ‘우골

탑’으로 상징되었던 때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교육 실태는 도저히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날이 갈수록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 균등은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격차의 실태가 어떠한지, 농촌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 볼 때이다.

교육격차는 교육 불평등과 유사한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교육 불평등이라는 용어가 이념적 의미가 큰데 반해, 교육격차는 실제적인 성격인 강한 측면이 있다. 교육격차는 교육 기회의 격차, 실제 교육활동에서 나타나는 교육과정에서의 격차, 교육결과에 따른 격차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교육격차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주로 교육결과의 격차인 학업성취 격차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수능성적 공개 등은 교육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학생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지역적인 환경 요인에 따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5개년도 수능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와의 지역 간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고와 특목고를 아우르는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성적’을 분석대상으로 9등급으로 이루어진 수능 등급을 1·2·3·4등급, 5·6등급,

7·8·9등급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4등급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시·군·구 지역의 빈도에 있어 서울 및 광역시의 구 혹은 시 지역이 85.5%를 차지하고, 군 지역은 겨우 14.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 서울 및 광역시와 군 지역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능성적 1~4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주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격차는 수능성적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통계청이 2008년 6월과 10월, 전국 초·중·고 273개 학교 학부모 약 34,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지역 간 격차가 사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구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와 가장 낮은 가구와 비교하면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는 약 9배 이상, 참여율은 약 2.7배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볼 때는 사교육비 지출이나 참여도 모두 서울지역이 가장 높고, 읍면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2007년도에 발표한 교육부의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사교육 참여율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소득계층 간 참여율 격차가 커지고, 지역별로는 강남>서울>수도권>광역시>중소도시>읍면

지역 순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간 교육격차와 사교육의 문제는 가계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교육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고,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결국 부모들은 자식 교육 때문에 농산어촌을 떠나고, 정부는 재정투자의 효율성만을 내세우며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3,743개교가 통·폐합되었고, 1999년 정부의 재정지원(2,577억원)하에 그해만 971개교가 통·폐합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김진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1982년부터 2008년까지 본교 및 분교장 폐지와 분교장 개편 학교는 모두 5,299개 학교에 이르고 있다.

2009년 3월 26일 현재 전국 1,205개 면 가운데 21개 면에는 초등학교(본교)가 없고, 이 중 14개 면

■연도별 학교 통·폐합 상황(1982~1908)

연도	초등학교(A)			중학교(B)			고등학교 학교 폐지(C)	계(D=A+B+C)			
	폐지		분교장 개편	폐지		분교장 개편		폐지		분교장 개편	계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계	1,079	2,210	1,760	115	43	43	49	1,243	2,253	1,803	5,299

은 분교조차 없는 실정이다. 인천(옹진군 북도면, 자월면), 경기도(연천군 왕징면, 장남면, 중면), 강원도(춘천시 남면, 삼척시 노곡면, 철원군 근북면), 전북(진안군 상전면), 전남(곡성군 검면, 목사동면, 옥곡면), 경북(영천시 자양면, 상주시 화남면, 의성군 신평면, 영덕군 달산면, 영양군 청기면, 성주군 금수면, 예천군 개포면, 보문면, 호명면)지역은 초등학교는 물론 분교조차 없다. 중학교가 없는 면은 397개로 전국 1,205개 면의 32%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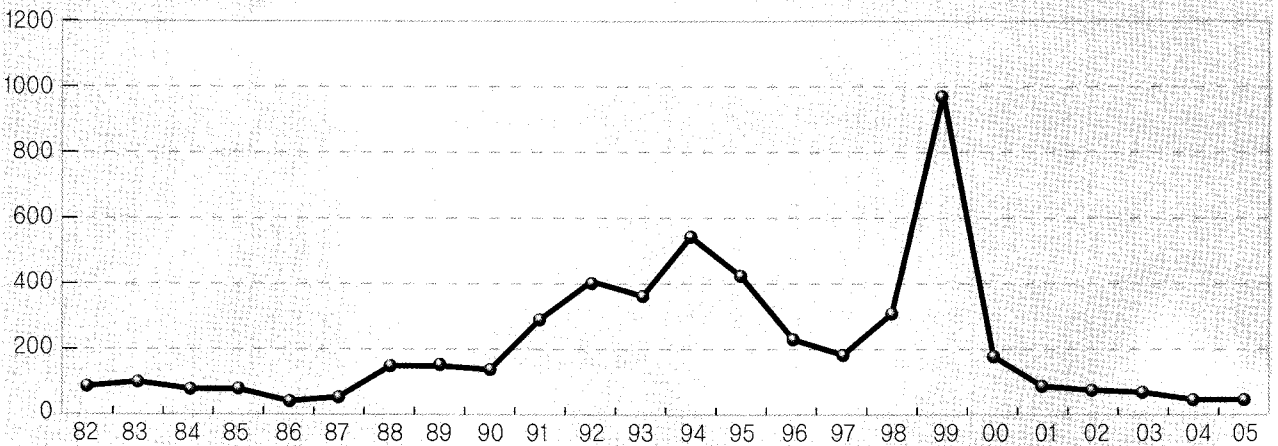
이 같이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것은 농촌 지역의 학령인구의 감소가 원인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우선시 했을 뿐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농촌 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여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학교가 학생교육은 물론 지역 사회의 문화적 공동체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문화적 공동체의 중심점이 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학생들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지가 단지 농촌이라는 이유로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를 통학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경우 정서적·교육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농촌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으로 유아단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단 한 명의 학생, 한 가정에서라도 학교를 자신의 지역에서 다니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심각한 교육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교육을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약속은 지켜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특단의 교육격차 해소 대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그동안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다양

■ 연도별 학교통폐합 추이(1982~2005)



화 300프로젝트, 학교자율화 및 학교교육 정보 공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입시제도 선진화,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개선·보완할 사항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숙사 시설을 만들고, 기숙사 연계 프로그램 등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주적 생활능력과 학습능력 향상 등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기숙형 고등학교 150교 지정·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2008년에는 '농산어촌 지역 거점교'를 중심으로 1군 1교 기준으로 82교를 선정하여 3,17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숙형 고등학교의 확산을 통해,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농촌 및 낙후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하여는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특히 지역적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 내에서도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당 평균 2억원을 지원하여 방과후학교를 활용하여 질 높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BS, 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IPTV 연계학습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맞춤형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종일 돌봄 교실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 방침이 사교육이 많

은 대도시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적으로 낙후된 농촌은 정부의 예산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더욱 교육적으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의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 계획은 백지화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밖에 저소득층 학력증진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를 위해 전체 초·중·고의 약 11%인 총 1,214개 미달학교에 대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을 통한 지원 확대,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교포 대학생 등을 농산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영어강사 활용 확대('08년 380명 → '09년 700명),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초등학교 대상 방학중 무료 영어캠프 운영('09년 6만명), 원어민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확대('09년 500개교, 3만명)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발표된 정책들은 아직 시행초기에 있거나 아직까지 학교단위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판단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든 교육격차를 줄이고,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교육 현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교육",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첫걸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